

정원오 “무능 시장 교체” vs 오세훈 “여당 시장은 허수아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막판 총력전

정 오 후보 주거정책 실패 비판 “대통령과 손발 맞춰 현안 해결”

오 “서울시민 5대 명령 실현하고 부동산 정책 개선안 적극 제안”

정원오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6·3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인 31일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원오 후보는 서울 시민의 생명·안전을 강조하면서 무능·무책임한 현 서울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후보는 부동산 개선안 등 ‘서울시민 5대 명령’을 관철하겠다고면서 여당 소속 서울시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장 후보들의 유세를 종합해 보면, 정원오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지역 유세에서 “오세훈 시장이 약속만 지켰어도 현재 주거 문제, 주거난은 없다. 또 무능해서 약속을 못 지킨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책임감 없는, 남 탓하는 시장을 용서할 수 없다. 시장을 바꿔 달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거론하고 “시장 최고 덕목은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남의 일,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일관하고 있다”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4일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을 맞아 유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정원오 후보가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 강동구 둔촌동역 사거리에서 유세를 하는 모습. /뉴스1



“이러니 오 시장 시기 때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시민 불안함이 그대로 나타나 는 것 아니겠나. 안전 불감증 시장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이 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겠다고 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발목 잡기 하면 이제 정상화 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힘들어 지지 않겠나”라며 “저는 대통령과 손발을 착착 맞춰 산적해 있는 주거, 교통, 경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가 자신을 겨냥해 ‘허수아비 수준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스스로에 대한 반성 아닐까 싶다”며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때도 주민들 이익을 위해 쓴소리를 과감히 했고, 이익을 위해선 뭐든 하는 경험, 경력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때 폭정에도 아무 말 못 했던 분이 이제 와서 일 잘하는 이 대통령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쏟아내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쟁 선 언이나 다름없다”며 “서울시장의 자리가

민생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세우기 위한 정쟁의 자리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번 더 시장직을 허락해준다면 임기 시작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 시민 5대 명령’을 대통령 앞에 설명하고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서울 시민 5대 명령은 3대 부동산 정책 개선안과 2대 민생 경제 민주주의의 회복 제언을 담았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첫째는 재개발·재개발 정비사업 정상화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지위양도제한을 풀고 공공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며 “(또)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를 제안하겠다. 도심 내 소형·중형 임대주택 공급자 세금 부담 완화 등도 적극 제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세금폭탄 예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고, 재산세는 현재 주택 가격 수준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며 “(또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저지해 민주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이 대통령만 걸심하면 민주당도 공소취소 특검을 백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를 겨냥해선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은 시급하고 엄중한 시민 5대 명령을 언급 못 하는 존재감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며 “이 대통령에 의해 선택된 정원오 후보자는 준임명직 허수아비 수준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오 후보는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 오세훈만이 말하고 설득하고 바꿀 수 있다”며 “각각한 거대 권력도 천만 시민 선택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무거운 민심을 제가 대신 국무회의장에서 쏟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與 “내란 심판 의지” 野 “李 폭정 엄중 경고”

6·3 지선 사전투표율 23.51% 2022년 지선 대비 약 3% 높아져

李 투표지 논란에 여야 상반된 입장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23.51%를 기록한 데 대해 여야는 31일 아전인수격 해석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심판과 이재명 정부 뒷받침 의지”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민심의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 투표해봐야 거기가 거기”라는 생각은 편견”이라며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은) 내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뒷받침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성과를 내는 실용적 지방정부를 위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달라”라며 “어느 후보가, 어느 정당이 정치적 도구로서 더 활용 가치가 있는지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 사전투표율은 23.84%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약 3%

가까이 높아졌다”며 “안전한 서울을 바라 는 열망이 투표로 나타난 결과다. 오세훈 후보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명백한 (심판) 실전”이라고 했다.

반면 최보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 단장은 논평에서 “이번에 나타난 역대급 사전투표율은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거대 여당의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목소리”라고 했다.

최 공보단장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죄를 덮기 위해 초법적인 재판 취소까지 서슴지 않는 오만함에 분노한 국민, 합량 미달 후보에게 우리 지역을 맡길 수 없

다는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행동으로 보여 준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율에 따른 유불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지난 지선보다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당에 유리하지 불리한지 따지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투표도 투표율이 높아져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하려는 국민의 분노가 표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전투표소 투표지 노출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기표 도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은 관권선거, 선거 개입,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한다”라며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은 억지 공세”라고 했다.

그러나 최 공보단장은 “선거 중립성을 훼손한 노골적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선거 개입”이라며 “더욱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면죄부를 발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하고 편향된 행태는 국민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뉴스1

국힘 장동혁 “부패 권력李·민주당 심판해야” 호소

“투표 포기는 권력 남용하는 자에게 자기 범죄 지을 기회 주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심판당해야 할 부패 권력인 이재명과 민주당을 주권자인 국민이 반드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총선과 대선, 정치에 무관심했던 대가로 최악의 저질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정치 무관심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재명은 SNS에 ‘투표 포기는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게 기

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라며 “우리가 투표를 포기하면 재판 취소라는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는 이재명에게 자기 범죄를 지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국민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지옥이다.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고통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안중에는 없다”라며 “이재명이 말하는 최악의 저질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 자신들”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악성 지배자는 대통령의 권력을 손에 쥐고 압도적 여당까지 거느린 이재명,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악법을 마음껏 통과시키고 전과자와 5·18모독 무자격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이라고 덧붙였다.

장 상임선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이재명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견어 찬지 오래”라며 “사전투표 사흘 전까지 시장을 돌아다니며 노골적으로 민주당 선거 운동을 했다”고 했다.

이어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가 발생한 날에도 자갈치시장에서 회 파티를 벌여놓고 청와대 돌아오자마자 서울시청 압수수색을 진두지휘했다”라며 “오세훈 후보 죽이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투표장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흔들었다. 내가 찍은 후보를 찍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던 중 기표소를 나와 무효표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간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으라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막나가는 없었다. 보

수정권 대통령이었던 민주당은 당장 탄핵부터 들고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장 상임선대위원장은 “서울의 칸쿰 정원오 (TV토론에서) 정책 하나 제대로 설명 못했다. 인친 박찬대장동은 매립지 소유권이 어디 있는지, 기본적인 사안조차 대답 못했다. ‘보수의 어머니’ 경기도 추미애는 이재명은 죄가 없고 검찰 잘못이라고 우겼다”며 “민주당 후보들은 무능은 기본이고 전과는 옵션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방정부를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이 내 자유를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우리 후손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투표하면 막을 수 있다”라며 “6월3일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 투표로 이재명의 폭주를 멈춰 세우자”고 거듭 말했다. /뉴스1